

■ <요약> 미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거시경제정책 : 정부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의 감축, 조세 지원이나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저축과 투자 증대 유도
- 제도개혁 : 反독점법 개정, 제조물책임(PL)제도의 개선, 지원 부처 신설
- 과학기술정책 :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지원 확대, 조인트 R&D 활성화
- 자본정책 : 풍부한 자금 공급, 자본비용 인하, 생산적 부문의 자본 유입 유도
- 인력교육정책 :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취업자 교육, 실업자 교육, 무능력자 교육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 기업경영전략 : 노사간 신뢰 구축, 새로운 기술과 기업 문화 도입
- 국제통상정책 : 무역 정책 결정 기구 개편, 미국의 수출 증대 지원책 마련, 다른 국가의 왜곡된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처

이 글은 미국의 MIT 생산성 위원회가 작성한 1980년대 미국 산업의 생산성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지난 호에 이어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이번 호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연구 보고서의 제언을 거시경제정책, 제도개혁, 과학기술정책, 자본정책, 인력교육, 기업경영전략, 국제통상정책 7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함

### □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거시 경제 정책) 정부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의 감축,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저축과 투자의 증대 유도
  - 정부 지출 축소 :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보다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재정적자의 경우 연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자본비용 인하 : 긴축적 재정지출 등을 통해 이자율 인하 유도
  - 세제 개편 : 저축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늘림. 특히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제품(담배, 주류, 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제도 개혁) 반독점법 개정, 제조물책임(PL)제도의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부처 신설
  - 반독점법 개정 : 합병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개정하여, 기업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효율성을 미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조물책임제도 개선 :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제조업체의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에만 한정하여 배상하고,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지원 부처 신설 : 산업계, 정부, 학계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원하고 경쟁력과 관련된 제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구의 신설 필요. <과학기술부>, <통상부>, 상무부 내 <국제경쟁력 정보센터> 등의 신설 고려
- (과학기술 정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서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

하므로,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요소 : 거시적 안목을 가진 정부, 전문지식을 가진 경영인, 고급의 연구 인력, 유능한 숙련 노동력이 필요
  - 연구개발 인센티브 부여 : R&D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의 대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예, R&D를 억제하는 지나친 환경규제 완화 등)
  - 정부의 지원 확대 : 대학 연구의 직접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 정부 운영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개선,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업화 지원
  - 과학기술부 신설 : 연구개발 조직간 업무 조정, 과학기술정책의 단일 창구화
  - 조인트 R&D 활성화 :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Sematech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 연구단체와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협동연구의 활성화
- (자본 정책) 신규 공장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정자본 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
- 자본정책의 초점 : 풍부한 자본의 공급, 자본 비용 인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
  - 이러한 정책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와 벌칙 부과로 달성할 수 있음
- (인력 교육 정책) :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취업자 교육, 실업자 교육, 무능력자 교육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 초중등 교육 : 기초 기술 및 컴퓨터의 조기 교육,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엄격한 학업 평가제도 도입, 초중등 교육비의 국가 부담 등
  - 고등 교육 : 엔지니어와 전문경영인 배출 중시, 학제간 연구 활성화,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학위취득 외국인 학생의 미국 취업 및 체류 장려
  - 취업자 교육 : 기업이나 개인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혜택, 정부의 자금 지원 증대, 직업훈련원 혹은 전문대학의 극대 활용,州政府-기업-노동자 파트너십에 의한 교육체계 개발
  - 실업자 교육 : 구직활동 지원 및 교육 제도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실업자 개인의 기능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활동 실행, 실업보험제도와 연계된 교육과 구직활동 지원
  - 무능력자 교육 : 사회적 무능력자(예, 문맹인, 비숙련자 등)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민간-본인의 공동 노력에 의한 해결책 모색

- (기업 경영 전략)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의 경영과 혁신 활동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함
  - 노사간 신뢰 구축 : 신뢰와 협력에 근거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윤 분배 및 종업원 지주제도 등 고려
  - 새로운 기술과 기업 문화 도입 : 기존 기술의 끊임없는 개량,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방식의 제품 설계-개발-제조 방식 도입, 기업 내 조직간 의사소통 방식 개선, 전통적인 조직 장벽 해소 등
  
- (국제 통상 정책) 미국 내 무역 정책과 정책 결정 기구, 미국의 수출 증대, 다른 국가의 왜곡된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 국제무역시스템의 개혁, 국가간 정책 조정,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 등이 주요 현안임
  - 무역 정책 : 체계적 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통상부' 신설, 수출기업의 국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독점법 폐지, 수출과 관련 제도적 장벽(예, 국가안보와 관련된 하이테크 제품 수출 통제) 제거
  - 수출 증대책 : 정부 보조 및 수출 금융 확대,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 외국의 무역정책 대응 : 시장개방 국가에는 자유무역 협정, 관리무역 국가에 대해서는 관리무역 협정으로 국가별 대응

#### □ 시사점

- 첫째, 민간자율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강조되어 있음
- 둘째, 단순한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됨
- 셋째, 정부와 기업간 대립적 관계보다 동반자적 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724-4046